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 ① 지역별 환수결정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6.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기관별, 지역별, 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함.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21.12 기준)을 살펴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음

[금융산업 글로벌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2023.06.19

'23.6.19일(월),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간담회는 전 업권을 아울러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사항 등을 토대로 7월 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2023.06.20.

'23.6.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비롯한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시장안정조치 지원실적과 각 금융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정상화 방안 및 최근 금융권 연체율 동향·대응 방향 등을 점검·논의하였음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

2023.06.21

작년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의 후속조치로 6월 21일(수), 금융위원회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임. 현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확정

금융위원회

2023.06.21

금융위원회는 6.21일(수)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함.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4대 추진과제를 수립함. 추진과제 ①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②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③ 자본시장 국제화,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임

(국정과제)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금융위원회

2023.06.22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6.22일(목)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

입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3.06.13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취약계층인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위하여 이를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1인

2023.06.19

채무자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하므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2023.06.19

협회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체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